

## 4.13총선 정당별 주요 공약패키지 분석②

# 4.13총선 유권자 지형의 특성과 청년공약의 효과

김철희 연구실장

(재)더미래연구소

---

# 차례

---

들어가며	1
4.13총선 유권자 세대지형 분석	3
정당별 청년공약 비교 검토	8
1. 새누리당	8
2. 더불어민주당	11
3. 국민의당	13
4. 정의당	14
정당 간 주요 청년공약 비교 검토	19
1. 최저임금	19
2. 고용할당제	21
3. 청년기본소득	22
4. 비정규-청년일자리	23
5. 학자금	25
6. 청년주거	27
7. 흡수저 등 계층고착화	27
결론	29

※ 4.13총선이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는 20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다. 또한 총선 결과는 박근혜정부 하반기 정치지형 재편과 직결되어 있고, 2017년 대선지형의 정당별·후보별 유불리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각 당이 구사하는 선거 전략이 초반부터 불꽃을 튀기며 부딪치고 있고, 여의도에는 사뭇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정치권을 비추는 언론은 흔히 후보 결정과정이나 그 결정과정에서 드러나는 갈등 양상에 집중한다. 인물집단의 조합방식이 결과적으로 향후 벌어질 정치현실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오래된 정치권 내의 경험칙이 작용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의 공약패키지라 할 것이다. 선거라는 압축적 정치공간에서 공약은 국민들의 평가와 지지 그리고 비판과 반대를 형성하는 효과를 낸다.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그 공약을 기준으로 선거에서의 지지를 공고히 하거나, 지지정당을 변경하기도 한다. 득표력을 가진 정당의 공약은 선거 이후 원구성 초기에 제출되는 이른바 “당론법안”의 기본틀이 되고, 자연스럽게 전반기 국회의 논쟁구조로 연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정당이 어떤 컨셉으로 정책패키지를 구성하고,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더미래연구소는 이번 4.13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이 제출한 주요 공약들을 패키지 차원에서 비교평가하면서 20대 국회 전반기 이슈지형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특히 불평등, 청년, 경제성장 등과 같이 사실상 비등점에 다다른 주요 이슈들에 대해 각 정당이 어떤 입장을 제출하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이슈들의 연원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전개될 정치질서 재편과정에 대한 해석과도 맞물리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더미래연구소는 총선을 맞아 집중적으로 각 정당별 공약을 비교분석하고 이후 정책지형을 예측해 보는 IR리포트를 연속적으로 작성하면서 두 번째로 “청년”을 점검해 보기로 했다.
- 청년공약이 선거를 치루는 각 정당에게 중요성을 가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0년대 초중반, 이른바 세계경제를 뒤흔든 세계금융위기를 전후해 등장한 “고용 없는 성장”의 후과로서 “청년실업”이 등장했고, 청년들의 집단화된 정책수요가 발생했다. 이러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정당의 청년공약이 제출되기 시작했다. 초기의 청년 이슈가 실업률이었기 때문에 각 정당은 청년일자리문제에 집중했다.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론」, 「고용할당제」 등이 대안으로 제출되었다. 청년세대가 장기간의 실업에 놓이거나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할 경우 빈곤상태에 빠지게 되고 한 세대의 빈곤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경제사회구조가 비정상적으로 왜곡되고 심지어 장차 그 다음 세대로까지 빈곤이 재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즉각적인 대응책이 요구되었다.

- 이런 청년고용에서 촉발된 문제는 이후 여러 분야로 전이된다. 좁아진 취업문을 향해 다수의 청년 구직자가 경쟁적으로 진입하려 하면서 과도한 스펙 경쟁, 감당할 수 없는 비싼 등록금, 치솟는 학생주거비 등 취업경쟁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비용 문제로 이슈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를 모두 “청년문제” 로 묶어 인식하게 된다.
- 한편으로는 청년세대와 함께 고령자 문제가 등장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의 조기퇴출문화 확산과 열악한 고령자 재고용 환경 속에서 고령노동의 문제는 예고되어 있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연령 도달로 말미암아 정치권에서는 고용관련 대책을 내 놓기 시작한다,
- 그런데 고령자 이슈나 청년문제가 모두 고용영역을 진양지로 한다는 것은 고용시장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시장 주도적 고용정책이 저고용 기조를 낳았고, 여하하게 이를 개선할 방법을 제시하지도 못한다는 데 있었다. 결국 이에 대한 대안은 정부의 고용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울러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정년연장법안 처리 이후 이 문제는 고령자고용과 청년고용을 부당하게 경쟁시키는 세대갈등 프레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sup>1)</sup>
- 앞서 본 바와 같이 청년문제는 본질적으로 한국사회의 특수한 경제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청년문제의 본질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현저하게 부족한 복지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간 청년문제에 대해 제시된 대안들은 현상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즉, 청년실업이 높아지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사회적 불평등” 과 “복지 시스템” 이다. 불평등의 증가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경제가 사회적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체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상황에서 전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시적 구조조정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결국 청년이나 고령자와 같은 상대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청년세대의 세대 내부적 불평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sup>2)</sup>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이한 이번 총선거에서 각 정당은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을까.

1) 실제 이러한 논리는 노동개혁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또는 “쉬운 해고” 도입을 통해 청년고용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출되기도 했다.

2) 김창환, 「불평등의 나라 미국 그리고 한국 : 불평등의 원인·추이·해법」, 『김창환의 경제를 말한다』 새정치연구회 등 3단체 공동세미나, 2015. 12.

## 2. 제20대 총선 유권자 세대지형 분석

- 청년세대 정치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청년유권자 수가 줄어들면서 정치권의 청년유권자들에 대한 관심 또한 줄어들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sup>3)</sup> 실제로 전체 유권자중 19세~20세 유권자 수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738만명에서 739만명으로 약 1만명 가량 늘었지만 50대 유권자는 759만명에서 837만명으로, 60대 이상 유권자는 817만명에서 984만명으로 각각 78만명과 167만명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19~29세 유권자 비중은 19대 총선에 비해 0.6%p떨어진 17.6%에 불과한 반면, 50세는 19.9%, 60세 이상은 23.4%를 차지 하면서 반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 통계로만 봤을 때, 노년층의 증가는 여당에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고, 반대로 야당에는 불리하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총선 유권자 분포 변화(%,%p,명)

세대구분	제19대국선		제20대국선		증감율	유권자수
	유권자수	유권자수	유권자수	유권자수		
19~29세	18.2	738만	17.6	739만	-0.6	1만
30대	20.4	822만	18.1	761만	-2.3	-61만
40대	21.9	882만	21.0	884만	-0.9	2만
50대	18.9	759만	19.9	837만	+1.0	78만
60대이상	20.7	817만	23.4	984만	+2.7	167만

\*출처 : 행정자치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분석

- 반면, 정반대의 내용을 담은 통계도 나왔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63.9%로 조사 되어 19대 총선에 비해 적극투표증이 늘어났는데(아래 표 참조), 모든 세대에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젊은 층에서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늘었고(19~29세 19.3%↑, 30대 12.5%↑) 반면, 고령자 층에서는 감소하는 현상(50대 2.0%↓, 60대이상 4.1%↓)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늘어나 야당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고, 실제로 여당인 새누리당은 예년과 달리 선거 중반부터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 빠르게 전략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 매일경제신문, 「말로만 청년...2030유권자 줄어드니 ‘찬밥」 2016.4.4.

최근 총선별 적극적 투표참여 의향분석 (%,%p)

연령별	제19대 국선		제20대 국선	증감률
		실투표율		
전체	56.9	54.2 (-2.7)	63.9	+7.0
19-29세	36.1	42.1 (+6.0)	55.4	+19.3
30대	47.1	45.5 (-1.6)	59.6	+12.5
40대	56.3	52.6 (-3.7)	63.2	+6.9
50대	67.4	62.4 (-5.0)	65.4	-2.0
60세 이상	76.9	68.6 (-8.3)	72.8	-4.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16.3.30., e-나라지표, 제19대국회의원선거 투표율분석

- 이처럼 상반된 2개의 통계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정말로 청년세대의 인구 축소로 정당들이 관심을 멀리하고 있는 것일까? 청년들의 투표율 증가로 청년세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일까? 이 두 가지의 통계가 모두 현실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번 20대 총선의 유권자 지형은 실제 지난 19대 총선에서 표를 던진 유권자 지형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실제 행자부가 발표한 20대 총선 세대별 유권자 수에 중선관위가 조사발표한 각 세대별 적극투표율을 대입해 보았을 때, 전체 투표자는 2,687만 명으로, 세대별 구성은 19-29세 15.2%, 30대 16.9%, 40대 20.8%, 50대 20.4%, 60세이상 26.6%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아래 표 참조).

제20대 총선 예상 투표자 수 및 세대별 비중 (%,명)

구분	제20대 국선 유권자 수	적극적 투표 참여율(예상)	예상 투표자 수	비중
전체	4,205만	63.9	2,687만	100.0
19-29세	739만	55.4	409만	15.2
30대	761만	59.6	454만	16.9
40대	884만	63.2	559만	20.8
50대	837만	65.4	547만	20.4
60세 이상	984만	72.8	716만	26.6

- 이 투표자 세대구성 예상비중은 지난 19대 총선의 총 투표자 세대별 비중인 19~29세 14.1%, 30대 17.0%, 40대 21.2%, 50대 21.6%, 60대이상 26.1%과 상호 비교할 때 사실상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아래 표 참조). 결국 최근 드러난 젊은층의 적극적 투표의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인구구조의 변화가 이를 각기 상쇄하여 사실상 2012년 있었던 19대 총선과 동일한 세대구도 하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세대별 투표자 비중 비교(19대 : 20대(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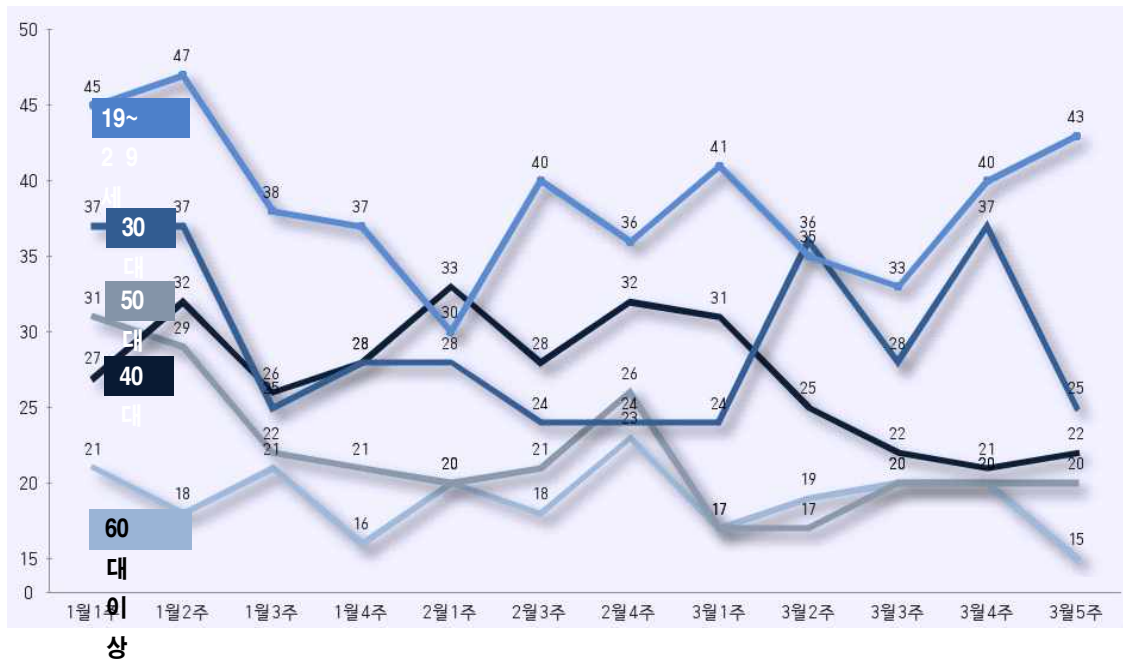
구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9대 투표자 비중	14.1%	17.0%	21.2%	21.6%	26.1%
20대 예상투표자 비중	15.2%	16.9%	20.8%	20.4%	26.6%
차이	1.1%p	-0.1%p	-0.4%p	-1.2%p	0.5%p

- 그러나 현재 청년세대 유권자층에서의 부동산이 증가하는 현상은 또 다른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2016년 1월 1주차부터 2016년 3월 5주차까지의 각 정당별 지지도조사에서 19세~29세 구간의 부동산 비중은 1월 2주차 47%를 최고점으로 하여 하락하다가 3월 5주차 조사에서 43%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투표일로 다가갈수록 40대, 50대, 60대 층에서의 부동산 비중이 줄어들면서 지지후보를 확정해 가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아직 젊은층 유권자들의 경우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당지지조사 각 세대별 부동산 비중 추이(%)

	1월 1주	1월 2주	1월 3주	1월 4주	2월 1주	2월 3주	2월 4주	3월 1주	3월 2주	3월 3주	3월 4주	3월 5주
19~29세	45	47	38	37	30	40	36	41	35	33	40	43
30대	37	37	25	28	28	24	24	24	36	28	37	25
40대	27	32	26	28	33	28	32	31	25	22	21	22
50대	31	29	22	21	20	21	26	17	17	20	20	20
60대이상	21	18	21	16	20	18	23	17	19	20	20	15



\*출처 : 한국갤럽 갤럽리포트 각 보고서

- 일부 언론들은 이번선거에 부동산이 많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 위 조사결과를 19대 총선이 있었던 2012년 조사<sup>4)</sup>와 비교해 보면, 20대를 제외하고는 이번 선거는 오히려 부동산 축소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갤럽의 2012년 1월~3월 평균과 2016년 1월~3월 평균을 비교해 볼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아래표 참조).

1월~3월 정당지지조사 각 세대별 부동산 평균 비교(2012 : 2014)

구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2012년	43%	37%	35%	29%	30%
2016년	39%	29%	27%	22%	19%
차이	-4%p	-8%p	-8%p	-7%p	-11%p

- 아직까지 청년유권자들이 지지후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지만 전통적으로 야당지지세가 강한 청년세대가 야권분열에 따른 실망과 야권단일화에 대한 관망세 유지를 이유로 지지후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특히나 야권단일화를 기대하며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해 왔던 이들이 야권단일화 무산에 따라 결과적으로 투표장으로 나갈 것인가 여부, 그리고 나갈 경우 어느정당을 지지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 다다르면서 청년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더군다나 선거를 일주일 정도를 앞둔 상황에서도 관세 예측을 불허하면서 격전지로 부상하는 수도권으로 한정해 봤을 때, 청년세대의 표심은 더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2016년 세대별 인구구성 비중(전국 : 수도권)(%,명)

연령구분	2016 추계인구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전체	40,853,510	100.0	8,145,948	100.0	2,327,753	100.0	9,847,578	100.0
20-29세	6,843,635	16.8	1,491,119	18.3	403,741	17.3	1,683,849	17.1
30-39세	7,534,072	18.4	1,656,251	20.3	458,662	19.7	1,991,275	20.2
40-49세	8,399,979	20.6	1,591,189	19.5	498,760	21.4	2,237,111	22.7
50-59세	8,223,311	20.1	1,570,239	19.3	494,102	21.2	1,979,143	20.1
60세이상	9,852,513	24.1	1,837,150	22.6	472,488	20.3	1,956,200	19.9

\*출처 : 통계청 연령별( 시도)추계인구

4) 한국갤럽 데일리 정치지표 제11호(2012년 3월 5주)에 의하면 각 조사대상 세대별 부동산 비중은 19~29세 42%, 30대 40%, 40대 36%, 50대 25%, 60대 이상 25%로 나타남.



제19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 비교(전국 : 수도권)(%)

구분	19세	20대	30대	40대이상
전국	47.2	41.5	45.5	61.0
서울	49.6	46.2	49.0	60.6
인천	50.1	42.1	42.4	57.1
경기	47.9	41.7	46.4	57.9

\*출처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분석

- 위의 각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인구 구성면에서 20대, 30대와 같은 젊은 층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이들 지역의 젊은 유권자층의 투표율도 전국 투표율이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번 선거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선택,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유권자들의 선택이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젊은 유권자들이 향후 투표일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예측해 보기 위해선 몇 가지 요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야권연대 실패에 따른 투표참여 의사의 변화여부, 야권연대 실패 책임의 귀속, 정권심판론에 대한 동의여부 및 당선가능 후보에 대한 지지여부 그리고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후보들의 공약이 최종 상황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될 것이다.
- 일단 새누리당은 야권연대 무산 국면에서 기존의 야권연대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과반의 석 위기론을 펴기 시작했다. 언론은 대부분 이러한 새누리당의 전술변화가 야권분열의 효과가 가속화될 시점에서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켜 내심의 목표의적인 180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입장표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젊은 유권자층이 야권분열에 대한 실망감을 이겨내면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야당들이 젊은 야권지지층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별도의 독자적인 전술구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이 내 놓은 청년공약이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정당별 청년공약 비교 검토

---

- 지난 3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역대 가장 높은 12.5%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해 같은 조사(11.1%)보다 1.4%p증가한 수치다. 구직단념자를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현재의 실업률 계산법을 감안하면 실제 실업상태에 놓인 청년들을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정부와 각 정당의 대응방식을 각기 달랐다.
-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개혁, 해외진출, 직업훈련 강화와 같이 구직자들의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고 기존 노동시장의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의 추가채용 동인을 확보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다.
-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기존 원내정당들은 정부여당의 청년 고용대책 효과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15년에만 전체 청년대책 142개에 약 10조원을 투입해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당들은 서울시와 성남시가 실시한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방식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이번 총선에서 보이는 각 당의 청년정책도 기존의 정책기조와 동일선상에서 마련되고 있다.
- 새누리당은 「일자리 더하기」공약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분야를 위주로 청년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에서 일자리 분야, 복지 분야, 교육 분야에서 청년 정책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일자리와 격차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공약을 통해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분야 위주로 청년 맞춤형 공약 제시한 후, 「청년희망프로젝트 : 공정한 출발」에서 일자리 분야, 노동 분야, 교육 분야 등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하였고, 정의당은 「청춘, 걱정하지 말아요」공약을 통해 일자리, 노동, 주거, 교육 분야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 정당별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새누리당

- 새누리당은 별도로 청년공약을 묶어 발표하지 않고 일자리, 노동, 사회적 배려 분야에 분산 배치시켜 놓았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더하기: 공급 중심, 산업 중심, 일자리 매칭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 분야에 관한 청년 정책 제시하고 있고, 「새누리의 공

정 곱하기: 차별과 격차 해소 통한 공정사회 구현」에서 비정규직 청년 정책을 부분적으로 추가하였으며, 「새누리당 배려나누기;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 시작됩니다」에서 청년주거문제를 밝히고 있다.

- 새누리당은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에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 시 벤처학자금을 수여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벤처기업에 의무근무, ▲재외공관(KOICA포함) 해외지사에 청년일자리 제공 및 워킹홀리데이 등을 통한 청년 해외진출 확대, ▲한예종에 청년예술가일자리지원센터 신설, ▲기업이 추구하는 문화예술사업 수요 파악 후 청년예술가인력 제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청년일자리 공약 세부추진계획

분야	공약	세부 추진계획
[2030청년] 미래일자리 더하기	청년희망아카데미와 함께 청년의 꿈 키우기! “대학 졸업자부터 만 34세까지 청년들의 확실한 취업 보장을 위한 청년 희망 아카데미 전국적 확대”	-현재 서울에만 운영되고 있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에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청년희망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지역 청년들에게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청년과 기업간 일자리 매칭 추진 *청년희망아카데미 내 미래역량교육프로그램(FCP), 엔지니어링아카데미프로그램(E.A.P), K-JOB 프로그램 신규 도입으로 맞춤형 일자리 확대
	벤처장학제도로 취업까지 확실하게!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재학시 벤처학자금 수여로 벤처기업 취업연계”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시 벤처학자금을 수여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벤처 기업에 의무 근무하게 하여 벤처기업 인력난 해소 -2016년 벤처 단체에서 시범운영 후, 2017년 본격 도입(소요비용: 3년간 75.4억원)
	청년 국제인턴 확대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경험 쌓는 기회,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재외공관(KOICA포함) 해외지사들 고학력 인력 활용 가능 -워킹홀리데이 및 비자쿼터 확대 등을 통한 청년 해외진출 확대
	청년예술가들에게 일자리, 국민들에게 예술향유 기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청년예술가 일자리지원센터 신설 및 전국의 예술대학교에 확대하여 예술 일자리 지원센터를 지칭 운영 -기업이 추구하는 문화예술사업 또는 메세나 활동 수요 파악, 필요로 하는 예술인재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신청받은 후, 이에 적합한 청년 예술가인력을 기업에 제공 -청년예술가들의 창업콘텐츠를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은 일자리 제공, 청년예술가들은 기업과 사회적 요구 충족하는 예술콘텐츠 제공

※출처: 새누리의 일자리 더하기: 공급 중심, 산업 중심, 일자리 매칭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새누리당 공약집

- 이에 더하여 새누리당은 ▲현행 내일배움카드제의 지원금액을 증액하고, ▲청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검정수수료 및 응시료를 지원하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새누리당 청년취약계층 지원 공약 세부추진계획

분야	공약	세부 추진계획
희망사다리 구축 중	취약 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 확대! “약 10만명 비정규직·청년 훈련지원비 증액 및 응시료 지원 혜택”	-취약근로자 훈련지원비를 연간 100만원씩 증액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비정규직, 중소기업 이직예정자, 무급 휴직·휴업자에 한하여 1인당 1년간 300만원으로 증액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청년 취약계층에 한하여 1인당 300만원으로 증액 -취약 청년계층(15~34세) 자격증 취득 시, 응시료 지원 *2017년부터 청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228,679명)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및 서비스 분야 자격증
	청년 취약계층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 등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검정수수료 지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수료 지급 근거 마련 -청년 취약계층이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경감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양질의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출처: 새누리의 공정 굽히기 차별과 격차 해소 통한 공정사회 구현; 정책공약집

- 그 밖에 새누리당은 청년들의 학자금 문제와 주거안정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0.2%↓), ▲빈집 활용을 통해 1~2인 가구 임대주택 제공,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및 대학연합기숙사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새누리당은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청년기본법」을 제정을 공약하고 있다.

새누리당 청년복지공약 세부추진계획

분야	공약	세부 추진계획
맞춤형 복지 [청년]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학자금 대출 금리 0.2% 인하(2.7%→2.5%) 통하여 청년 및 가계 부담 완화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 대상 거처 및 상환기관 추가 연장 허용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이 본인의 상환부담능력(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거처 및 상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채무부담 완화
	청년의 권리 규정을 정한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기본법 제정 *통합적인 상위 근거법률, 파편화된 청년정책 관련 예산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집행,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 수립 및 계획 단계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시 내 빈집 등 정비로 1~2인 가구 주거안정 도모, 고시원·옥탑방·반지하 등 서민 주거의 질 개선”	-빈집 등을 활용하여 청년, 독거노인 등을 위한 1~2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제공 *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60억원의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1:2 매칭)하여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땅은 주차장, 썬지공원, 텃밭,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로 활용 *(가칭) ‘도시 빈집등 정비를 위한 특례법 ‘을 제정하여 지자체별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 활용사업 지원, 빈집 관리 정보체계 구축, 토지수용권 등 제도 마련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및 어르신들의 주거 편의를 위한 공공실버주택단지 조성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17년까지 14만호 공급 * ‘17년까지 14만호 공급계획이며, 현재 9만여호 확정됨. -거주기간은 기본 6년이며,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10년까지 거주 가능 -주택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 설치

지속적으로 확대"	-행복 주택 가운데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17년까지 최대 10개 조성 * '17년까지 공급하는 행복주택 14만호 중 5.3만호는 신혼부부용 투룸으로 건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자녀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함께 도입
대학연합기숙사 확충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연합기숙사 확대"	-국공유지 등을 기숙사 건립 부지로 활용하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확대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추진 *공공기금 또는 민간기부금, 국고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하여 건립비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학생 주거환경 개선	-기숙사 유해실내환경 리모델링 통한 학생주거환경 개선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 통한 그린캠퍼스 구현

※ 출처: 새누리당 공약집 맞춤형 복지 중 청년 파트, 새누리의 배려나누기: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 2)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민생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에 관련된 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서 ▲청년일자리 70만개 및 청년안전망 도입, ▲청년주거개선 등의 공약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복지공약 중 청년부분 세부추진계획

분야	공약	세부 추진계획
청년에게 '희망'	청년일자리 70만개와 청년안전망 도입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8천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한시도입 25만 2천개 -주 40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 11만 8천개 -취업활동비 지급(월 60만원*6개월)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청년 주거 개선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호 공급

※ 출처: 더불어민주당,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민생복지 공약"

-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은 이와 별도로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부적인 청년공약을 제시했다.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취업활동 지원금 제공 및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비정규직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채용 및 국민안전관련 업무의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3동원칙 입법화 등 비정규직 보호, ▲모태 펀드에 청년계정 신설 등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한국형 팹랩(Fab-Lab) 조성, ▲최저보험료 가입혜택 제공등으로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성년 축하와 취업 장려를 위한 국민연금지원 제도

도입,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병월급 월 30만원까지 인상 추진, ▲저소득층 대학등록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및 환급, ▲장기적으로 소득연계형 등록금 검토, ▲지방 고졸생과 저소득계층 우대를 위한 대학 균형선발 의무화 추진 등의 공약 등이 세부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안정망 공약 세부추진계획

분야	공약	세부 추진계획
청년 일자리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전체 고용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단계적 증원, 34만 8천개 일자리 창출 (4년간 매년 8만 7천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 청년고용할당제 합리적 도입,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37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취업활동 지원금 제공 및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준의 취업활동지원(금) 지급 -기존 ‘청년내일찾기패키지’ 를 확대 개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합운영 방식으로 최초의 등록과 상담부터 전략수립, 직업훈련, 경과형 일자리 제공, 취업알선, 사후관리.
	비정규직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 로 전환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고용)하도록 하고, 특히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되는 분야 외주화 금지 입법 -일정비율 이상의 기업이 일정비율 이상의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급, EITC로 비정규직에게 환급) “정규직 전환 지원금 년 1,200만원(월 100만원)” 까지 확대 -3의원칙(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입법화, 현행 두루누리 지원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 1년미만 근속자 퇴직급여 보장, 신청주체 및 비교대상 확대 등 차별시정제도 개선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을 1만원으로, 생활임금제 전국 확산, 관련 민간기업 노동자까지 적용 유도
	모태 펀드에 청년 계정 신설 등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모태펀드의 출자분야에 청년계정을 신설하여 청년창업 인프라 강화 -한국형 팹랩(Fab-Lab) 조성 -전 주기적 창업 보육 체계 내실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스마트 창업기업 육성 지원
청년 복지	성년 축하와 취업 장려를 위한 국민연금지원 제도 도입	-국민연금 성년축하 가입지원 · 취업장려가입지원 제도 도입. 국가가 모든 청년에게 최소한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연금 장기가입 -성년축하 연금가입지원: 만 20세가 된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저보험료(월 2만 4천원) 3개월 납부 혜택 제공 -취업장려 연금가입지원: 만 30세가 된 청년 중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3개월 최저보험료 납부 혜택 제공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으로 주거 환경 개선	-공공임대 재고량을 향후 10년간 13% 수준으로 확대(250만호) -기존의 원룸 외에 1주택 2~4룸식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장기적 10만호 수준 공급 -신혼부부용 스마트주택(소형, 인텔리전스)을 매년 5만호 이상 공급 -신혼부부 주거지원 요건을 대출액을 현실화, 자격요건 완화
	사병월급 월 30만원까지 인상 추진	-사병월급 월 30만원까지 인상 추진

청년 교육	저소득층 대학등록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및 환급	-장기적으로 소득연계형 등록금 검토
	지방 고졸생과 저소득 계층 우대를 위한 대학 균형선발 의무화 추진	-정원내 기회균형선발 확대 대학에 대해 국가재정지원 사업 확대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들에게 지방대 의대·한의과대·치과대·약학대 의무할당제 실시 및 장학금 확대 -저소득층과 지방 우수인재의 법학·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의무 할당제 실시 및 장학금 지원 확대 -신입사원 채용시 일정비율 이상을 계층할당 선발 의무화 -수도권 출신 편중 방지를 위한 지역인재 균형 선발 의무화

※ 출처: 더불어민주당,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 3) 국민의당

- 국민의당의 청년공약도 일자리 분야나 창업지원부터 학자금 지원과 같은 복지분야까지 제출되어 있다. 국민의당의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공약은 다른 당에서는 볼 수 없는 공약으로 눈길을 끈다. 국민의당은 ▲5년간 한시적으로 5%청년고용할당제(정규직)를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으로 확대, ▲소득하위 70% 구직청년들에게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할증보험료와 최대 250만원을 반환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 ▲청년스타트업 기업제품 우선구매제 도입, ▲채용절차 공정화 등을 위한 법률조항 신설, ▲고용주에 대한 「근기법」 교육, ▲현장실습생에 대한 근기법 적용, ▲근로감독관 위반적발 시 합의유도 후 형사고발, ▲학자금 이자율 경감(2.7%→1.5%), ▲대학입학금 폐지/등록금 심사제도 도입,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제도 사각지대 개선, ▲정당국고보조금 10% 청년사업 할당 의무화, ▲미래세대특별위원회 설치, ▲일자리, 주거 등의 청년 문제를 한 번에 접근 해결할 수 있는 One-Q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연령을 34세로 상향조정 등을 공약하고 있다.

국민의당 청년공약 세부추진계획

분야	공약	세부 추진계획
청년 일자리 지원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6개월 간 50만원의 구직급여 지급 *수급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구직자 중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자 *수급자들은 취업 후 4년간 할증고용보험료 납부(2.5%) *후납 상한액은 250만원 *25세 이상 구직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25세~34세까지 우선적용)
	청년스타트업 공공구매 확대	-공공구매제도에 청년 스타트업 기업 제품 우선구매제 도입 -창업지원 심사단에 청년기업가 참여 확대
	청년구직자 인권보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구직자 인권보장관련 조항 신설



		-채용이 되지 않더라도 채용지원 시점으로부터 약속된 각종 구두 계약, 서면계약에 대한 준수 의무 강화
청년 학비 경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절/최저임금보장	-고용주 의무교육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포함 -대학 현장실습생, 직업체험형 인턴 등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근로기준법」 강화 -지방노동청 산하 근로감독관이 위반사례 적발 시 합의를 유도하 되, 고용주가 체불임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 발
	학자금 이자율 50% 경감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낮춰 이자부담 완화
	대학입학금 폐지/등록금 심사제도 도입	-「고등교육법」 개정 *고등교육법 11조 개정을 통해 입학금 폐지 -대학예산의운용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대학, 교수, 학생이 참여 하는 등록금 심사제도 도입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제도 사각지대 개선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구제신청제도 운영 -소득분위산정법의 개선책 강구 -교내 외 장학금 제도 변경 시 정보공개 및 사전고시
청년 권익 보호	정당국고보조금 10% 청년사업 할당 의무화	-「정치자금법」 제28조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10%를 청년 정치발전을 위해 지원 -지원금 중 일정 금액을 청년정치참여기금으로 조성 지급
	One-Q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의 권익증진과 권리보호에 관한 「미래세대발전기본법」 제정 -미래세대특별위원회 설치 -일자리, 주거 등의 청년 문제를 한 번에 접근 해결할 수 있는 One-Q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연령 조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상 청년 정의규정을 34세로 상향 조정

※ 출처 : 국민의당, “청년희망프로젝트: 공정한 출발”

#### 4) 정의당

- 정의당의 경우 「청춘,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제하의 청년공약 패키지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고, 공약의 양도 다른 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당의 경우 기존의 일자리, 노동정책을 확장적으로 적용해 청년일자리 질적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정의당의 공약이 다소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추려보면 ▲청년고용할당제 상향조정(2%→5%)로 매년 24만 5천개 일자리 창출, ▲청년미취업자를 고용기업 고용지원금 지원하고 비준수 기업 명단공개 및 부담금 부과, ▲상시지속 업무 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주요 대기업 사내 하청 즉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장시간 근로 퇴출. 법정 근로시간 52만 개 지켜 62만개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경영교육 이수자와 소상공인협동조합 연계하여 소상공인 살리기와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동시 달성, ▲기회균형채용제(청년할당 채용자 중 여성 30%, 고졸이하 학력 10%, 전문대와 지방대 30% 등 할당) 도입,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및 부당채용 기업 처벌 강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를」 개정으로 수저색깔 없는 표준이력서·차별 없는 채용과정 법제화, ▲ 채용과정 공정화 등을 위한 「취준생 보호법」 제정, ▲ 청년디딤돌급여 도입, ▲ 단체협약이 없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에 다수 종사하는 청년에게도 휴일과 휴식 보장, ▲ 각급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인턴제도 폐지, ▲ 각종 실습교육에 대해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실시, ▲ 수습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 ▲ 정부 공인 ‘안심중개포털’ 구축 임차인에게 적절한 주거정보 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여 최대 20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증금 대출하는 ‘보증금 안심대출’ 제도 신설, ▲ 국가표준등록금 도입으로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2014년의 경우 350만원), ▲ 고른 기회 대입전형을 모집인원의 11%에서 20%로 두 배 확대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정의당 청년공약 세부추진계획

항목	공약	세부 추진계획
괜찮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청년고용활당제 민간기업 확대	-청년고용활당제로 매년 24만 5천개 일자리 창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청년미취업자 비중을 기존 대비 3%에서 5%로 상향 조건. (1만 5천개)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 역시 매년 상시근로자의 5%씩 청년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경우 매년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한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함.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도 고용창출, 일자리 늘리기에 해당. -상시지속 업무 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주요 대기업 사내하청 즉각 정규직 전환. -인건비 총액관리제에 따른 공공기관 정원 조정 및 합리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 시 정규직 전환 실적을 반영, 무기계약 전환자에 적합한 직급체계와 임금체계 신설, 합리적 근거 없는 민간위탁사업은 공공부문이 직접 시행. -재벌 계열사의 제조업 부문 사내하청은 현대자동차 불법과건에서 드러났듯 대부분 상시 지속적 일자리이며 불법파견. ‘좋은 일자리 최대 40만개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안전, 복지,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증원 -철도 지하철 2인 승무제 실시 등 교통·에너지 분야 안전 인력 확충.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급여서비스 강화와 심사평가 등 인력 충원 -간호사 신규채용 -초·중·고를 포함해 교사정원을 약 4만 4천명 증원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장시간 근로 퇴출. 법정 근로시간 52만개 지켜 62만개 일자리 창출 -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시간 특례 등 각종 예외조항 삭제.
	협동조합 청년 CEO 육성	-협동조합 청년경영자 양성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인재풀 형성 -협동조합 경영교육을 이수한 청년인재와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연계하여 소상공인 살리기와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동시 달성.
공정하며 투	기회균형채용제	-기회균형채용제 도입

명하며 자존감 있는 채용	도입	*민간기업이 5% 청년고용할당을 실시할 경우 청년할당 채용자 중 여성 30%, 고졸이하 학력 10%, 전문대와 지방대 30% 등 청년할당 내 할당을 실현해 다양한 청년들의 균형 있는 채용 보장.
	금수저 취업청탁 근절, 친인척 취업특혜 제한	-고위 공직자 자녀 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등 공직자윤리법 강화로 취업청탁 방지 -고위 공직자 취업 청탁에 의한 부당 채용을 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 처벌 강화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수저색깔 없는 표준이력서 · 차별 없는 채용과정 법제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고용노동부가 2007년부터 사용하도록 권장한 표준이력서 도입 의무화함. 나이, 성별, 외모, 출신지역, 학벌,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면접에서도 구직자에게 해당 정보를 요구하는 것 금지.
	취준생보호법으로 채용갑질 해소	-「취준생 보호법」(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정 *채용 모집 과정에서 연봉(초봉) 공개 의무화, 채용을 빙자한 노동력 착취 제한, 불합격 통보 공지 의무화, 필기전형 점수 공개, 면접 응시자에 대한 최저교통비 제공 의무화
실패해도 다시 잃어서는, 단단한 실업안전망	고용보험 전면 개혁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제공하고 사표 쓸 자유 부여 -실업급여 기여기준을 고용보험 18개월간 180일 가입에서 최근 3년간 180일로 완화 -실업급여 평균 수급기간은 103.3일에서 180일까지 연장 -고용보험료를 현재 노-사 각 0.65%에서 각 1% 인상함.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2%로 인상할 경우 현행 6조 3천억원인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 수입 2019년 13조 3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폭 해소	-특수고용노동자의 의무가입 대상 확대 및 고용료 50% 지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직 6개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의무화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재학생 포함) 전면 가입 -두루누리사업 지원 대상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월 180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
	실업급여2(실업부조), 청년디딤돌급여 도입	-실업급여Ⅱ(실업부조) 도입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이 미만한 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자, 실업급여 소진자, 폐업한 자영업자 중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최저임금의 80% 지급. -청년디딤돌급여 도입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중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이 미만한 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자, 실업급여 소진자 중 가구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자에 대해 최대 1년간 540만원, 월 50만원의 청년디딤돌급여 I 제공. *청년급여 수급자는 고용안정기관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소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야 하지만, 최초수급 3개월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직업안정기관에 증명하지 않으며,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달리 완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독립적인 일자리 탐색 기회 -실업급여Ⅱ와 청년디딤돌급여 참가자는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에 취업한 자를 포함함. -추가적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노동시장 지출액을 현재 0.6%에서 1%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300인 이상 기업 중 비정규직(직업고용, 간접고용 모두 포함)의 임금 1.0%에 해당하는 추가적 고용보험료를 신설하고 노-사 공동의 고용보험료 인상과 함께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함.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인	5시 퇴근법 도입	-5시 퇴근법 제정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해

		<p>실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하도록 하고 9시 출근 5시 퇴근을 하도록 함.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p>
간다운 삶	모든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국경일과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전환. 연차 휴가 외에도 연간 최소 17일의 추가적 휴일, 단체협약이 없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에 다수 종사하는 청년에게도 휴일과 휴식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여름휴가를	-여름휴가법(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5일의 휴가를 보장함.
생애 첫 일자리 개혁, 존중받는 젊은 노동	열정페이 OUT! 인턴제 폐지, 실습을 실습답게	-공공기관 행정인턴,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제를 비롯해 각급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인턴제도 폐지. -고용노동부는 학기 및 방학 중 실시되는 각종 실습교육에 대해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실시.
	노동부 근로감독 2배 증원, 나쁜 일자리 검색제 도입	-근로감독관 정원 2배 증원 *현재 근로감독관 정원 2배 증원, 근로감독관의 연수 및 교육 제도를 보완하여 공정한 근로감독을 위한 능력 고양 -명예근로감독관 위촉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성차별, 산업재해 등 노동기본질서 위반사업장 인터넷 검색제도 도입
	청년일 자리에 대한 각종 차별 금지	-「고용보험법」 별표 1을 개정하여 30세 미만 가입자에 대한 실업급여 30일 삭감을 삭제하고 개정함. -「최저임금법」 개정함. 수습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함.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탈출, 인간다운 주거	월세 공정임대료 실현	-규칙 없는 민간임대시장에 정부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로 ‘사회적 임대시장’을 만들어 냄. -정부 공인 ‘안심중개포털’을 만들어 영세임대업자와 영세중개업자의 매물등록은 물론 임차인에게 적절한 주거정보 제공 -공정임대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은 매물을 우선 등록, 세제 지원과 리모델링 지원 등을 받되, 정부가 정한 ‘공정임대료’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함.
	월세 보증금 안심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여 최대 20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증금 대출하는 ‘보증금 안심대출’ 제도를 신설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70% 미만인 자에게 연 금리 2%, 최장 10년이 가능한 대출 실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원룸 공정관리비 실현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중개업자는 공정 공인중개사로 인증을 받는다면 정부가 설치, 운영하는 안심중개포털에 매물을 우선 등록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만 함.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공정 관리비를 비롯해 우선 문제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
진짜 반값등록금, 정부책임 대학개혁	국가표준등록금 제 도입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국가표준등록금 도입으로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2014년의 경우 350만원 -OECD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법인세와 내국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2016년 9.2조원 보다 확대 *대학등록금 반값,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학 균형발전 및 특성화 등에 활용 -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적립금 및 과도한 이원금 조정 *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은 적립금 총액의 10% 넘지 않도록 정비 *과도한 이원금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재정적 조치
	고른 기회 대입전형 2배 확대	-고른 기회 대입전형을 모집인원의 11%에서 20%로 두 배 확대
	대학 균형발전	-대학 균형발전, 대학 연합의 통합전형 및 공동 교육과정





	과 대학 서열화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균형발전법 제정. 대학에 골고루 재정 지원</li> <li>*여러 대학 연합 통합전형, 공동 교육과정, 전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li> <li>*부실 사립대의 국공립대학 및 정부책임형 사립대 전환</li> <li>-기초학문과 지방대 육성하면서 합리적인 대학 개편</li> <li>*기초학문과 지방대 육성하고 학문 특성과 구성원 의사 존중하면서 대학 개편</li> <li>*교육여건의 법정기준 강화하여 고등교육의 기초체력 향상.</li> </ul>
--	----------------	---

※ 출처 : 정의당, “청춘, 걱정하지 말아요”

## 4. 정당 간 주요 청년공약 비교 검토

-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각 정당이 내 놓은 청년공약은 그 폭이나 깊이의 면에서 각기 일정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 정당이 표방하는 공약 중에는 청년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약들이 중첩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를 직접 비교하는 적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최근 들어 쟁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고용할당제, ▲청년기본소득 및 복지, ▲비정규 청년일자리, ▲학자금, ▲청년주거, ▲휴수저 등 계층고착화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각 정당별 공약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 1) 최저임금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최저임금	-2020년 4월까지 최저임금시급 8,000원~9,000원 수준 인상효과	-2020년까지 1만원 인상 -생활임금제 전국확산	-근로자평균소득의 50%까지 인상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절/최저임금보장 (근로감독관 합의유도 후 사법처리)	-2019년까지 1만원 인상

- 최저임금은 전통적으로 노동이슈로 분류되는 주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령자일자리와 함께 청년일자리들이 주변부 일자리로 취급되고, 이러한 고용형태에서의 임금이 교섭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면서 대체로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직상위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렇게 최저임금은 현재의 청년일자리 임금수준을 결정짓는 중요기준이 되면서 최저임금은 청년이슈에서 관심을 두는 중요정책이 되었다.
-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의 최저임금으로는 실제 늘어나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저임금노동을 양산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특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정방식이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같은 기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이들 두 당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공약을 내 놓고 있다. 다만 두 당은 목표시점을 더민주 2020년, 정의당 2019년으로 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두 야당의 공약은 현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간 13.5%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목표의 현실성 여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직격으로 맞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지급여력 확보방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의 제도적

방안 미비 등이 비판받고 있다.

-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별도의 공약이 없었다. 그러던 중 4월 3일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현 시급 6,030원인 최저임금을 20대 국회 임기 중에 8,000원~9,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이슈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5일 조원동 새누리당 선대본 경제정책본부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강봉균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전한 보도는 오보이며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늘려 최저임금 9000원 인상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했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현재의 인상률(연평균 7.1%)를 유지해도 달성되는 목표치라거나 입장변경이 결국 “재계 눈치 보기” 라거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 국민의당은 처음 최저임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지 않고 ‘근로자 평균소득의 50%’라고만 밝혔다. 이 당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최저임금 결정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4월 5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됐다. 한편, 국민의당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을 막고 법정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14일 후 사법처리 절차를 개시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이는 이미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방식으로 공약화의 의미가 없다거나, 오히려 감독기관의 합의유도와 사법처리 기피 관행이 사용자들의 상습적 임금체불을 불러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저임금노동을 개선시키는지 아니면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 고용을 축소라는 부작용만 낳는지, 최저임금이 저임금 고용이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인건비부담을 늘릴 뿐 오히려 대기업 보유의 이익분배효과는 미미하다는 등의 논란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
-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대선에서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나,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 등을 통해 여러 나라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결국 이 쟁점은 새누리당이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한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청년유권자들에게는 여당과 야당을 가르는 의미 있는 선택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결과적으로 야당들이 모두 동일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어느 특정 야당에게 유리한 쟁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2) 고용할당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고용할당제	-없음	-공공(3%→5%), 민간(3%~5%)로 청년고용할당제 한시도입	-5년간 한시적으로 5%청년고용할당제 (정규직)를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으로 확대	-청년고용할당제 상향조정(3%→5%) 및 민간확대 -기준 미달 기업의 명단공개 및 부담금 징수

- 고용할당제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해 매년 정원의 일정비율에 따라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청년에 대한 고용할당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현 제도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고, 미이행시 명단공표와 경영실적반영과 같은 간접조치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뿐 직접적인 벌칙 또는 과태로 부과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무고용과 같이 고용비율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고용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 새누리당은 고용할당제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19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청고법」 관련 입법 논의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기업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들면서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던 점에 비추어보면 고용할당제의 확대에 찬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공히 현재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 비율을 5%로 확대하고, 이를 민간기업으로도 확대시키는 방안을 내 놓고 있다. 야3당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관리하는 주요지표로 구직단념자를 빼고 산정하는 실업률지표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고용율을 지표로 삼아야 하고, 그 논의의 확장에서 다소 인위적이더라도 청년세대에 대한 의무 고용 방식을 통해서 청년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맥락에서 이와 같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 청년고용할당정책의 모델이 된 것은 2000년 벨기에가 실시한 로제타 플랜(Rosetta plan)이다. 당시 대졸자 50%가 실업에 처해지는 상황에서 청년실업사태가 발생하자, 근로자 5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노동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처벌조항을 두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벨기에에는 시행 첫해에 약 5만 건의 고용계약을 체결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당시 만들어진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3년 뒤에 다시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야기했고, 저임금일자리로 만들어지면서 차별적 기업문화를 만드는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점은 현재 보수정권이 고용할당제의 한계를 지적할 때 동원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이 청년고용할당제에 따른 고용을 정규직(무기계약직을 포함하는 개념인지는 불분명)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고, 정의당이 제시한 고용부담금 및 차별조항의 입법도 의미있는 정책적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 앞의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고용할당제와 관련해 여야간의 입장차는 명확했고, 야당 간의 차별점은 부재했다. 청년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분야다. 다만 유권자의 입장에서 현행 제도가 시행 1년여가 갓 지난 시점에서 제도효과를 겪어보지 못했고, 아직 공공부문에서조차도 폭넓은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결정적 정책공약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 3) 청년기본소득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기본소득	-없음 <sup>5)</sup>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들(NEET포함) 취업활동비 월 60만원 6개월간 지급(연간20만명)	-소득하위 70% 구직청년들에게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할증보험료와 최대 250만원을 반환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	-요건 해당 미취업 청년 중 가구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자에 대해 최대 1년간 540만원, 월 50만원의 청년디딤돌급여 I 제공.
청년복지	-청년기본법 제정	-국민연금지원제도 도입	-One-Q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재학생 포함)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II(실업부조)도입

-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청년세대가 취업이나 창업 등의 사회진출을 준비할 때 절대적 빈곤상태에 빠져 정상적으로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없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은 이와 같은 청년세대를 위한 기본소득 제도<sup>6)</sup>를 선보였다.
-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된 공약을 제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몇 차례 야당의 청년기본소

5) 새누리당은 현행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하여 10만명의 비정규직 및 청년에 대한 훈련지원비를 연간 300만원으로 상한하여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바 있으나 이는 대체로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6) 각 정당이 내 세운 청년공약들이 엄밀하게 보면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벗어난 정책들도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득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포폴리즘 공약이라고 평가하고 그 대신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고용촉진수당 등을 대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취업활동비” 라는 이름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미취업 청년(실망실업자 포함)에 대해 월 60만원을 총 6개월간 지급하자는 공약을 내 놓았고, 국민의당은 소득하위 70% 구직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 후 할증보험료와 250만원 상한의 금원을 반환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을 내 놓았으며, 정의당은 소득하위 70%의 미취업 청년에 대해 월 50만원씩 1년간 최대 540만원을 제공하는 “디딤돌급여 I” 을 제시했다.
- 야당의 공약들은 비슷하면서도 일정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모든 청년세대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설계한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하위 70%에 해당하는 청년미취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야3당이 설계한 기본소득금액은 월 50만원~60만원이고 지급기간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6개월, 정의당은 1년으로 설계했다. 국민의당은 이를 후납형으로 설계해 취업 후 반환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 청년복지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 제정,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조기가입 할인 보험료 적용, 국민의당은 주거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One-Q 사회안전망 구축, 정의당은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부조 제도인 실업급여II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관련 쟁점은 얼마 전까지 매우 뜨거운 쟁점이었고, 청년세대를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쟁점이다. 다른 한편에서 포폴리즘이라는 비판과 그 반대편에서 청년의 위기에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이 공약은 존재자체만으로도 청년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면서 투표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여겨진다.

#### 4) 비정규-청년일자리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비정규 청년 일자리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으로 격차해소 -비정규직임금 정규직의 80%수준으로 상향 -청년희망아카데미 -벤처 장학제도 -청년 국제인턴 확대 -청년예술가들에게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의무화 -비정규직 고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도입 -3同원칙 입법화 -공공부문일자리 348천개 창출 -공공고용서비스	-상시업무에 기간제 대체시 6개월간 채용금지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전액 기업 부담 -청년스타트업 공공구매 확대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의무화 -대기업 사내하청 정규직전환 -파견법 단계적 폐지 -공공기관 인턴제도 폐지 -협동조합 청년경영자

	일자리	-모태펀드에 청년 계정 신설 등 청년 창업지원		양성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인재풀 형성
--	-----	---------------------------------	--	----------------------------





- 청년일자리 정책은 지난 몇 차례 선거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공약이다. 서두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한국에서 초기에 등장한 청년문제가 청년실업의 형태로 나타난 만큼 청년일자리 정책은 이미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다. 더군다나 그동안 정부는 2015년에만 1조 7,584억 원을 투입해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했고, 2016년에도 67개<sup>7)</sup> 사업에 대해 총 3,692억 원을 증편한 2조 1213억 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상황은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근 사상최대의 청년실업률의 증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더욱 악화되고 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와 관련해 각 정당이 내 놓은 공약은 예전의 공약들과 크게 다른 면을 보이지 않고 있다.
- 한편, 이번 선거에서 특징적인 것인 비정규직 정책을 청년정책과 묶어 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최저임금공약을 검토하면서도 살펴봤지만 청년일자리 상당부분이 서비스에 몰려있고, 최근 늘어나는 서비스직종의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새누리당의 일자리정책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 일자리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정당들이 일자리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고용할당제 등을 이용해 직접 고용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에 비해 새누리당은 고용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보다 구직자를 측면에서 지원하거나 사용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청년 일자리 공약은 기존의 정부 발 청년정책들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정부주도의 청년일자리 윈스탑 서비스인 “청년희망아카데미” 나 이미 몇 년간 청년정책으로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해외인턴제” 가 그대로 공약화 되어 제출되었다.
- 아울러 새누리당이 제출한 비정규직 정책은 사실 기존에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과 동일 선상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 노동시장 유연화가 청년 고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약이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은 상시업무에 비정규직 채용제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 3동원칙과 같은 전

7) 2016년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청년일자리사업은 총 5개 분야 67개 사업으로, ① 직접일자리사업(▲중소기업청년인턴제,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해외봉사단(ODA),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청년창업인턴), ② 직업능력개발사업(▲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학습병행운영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기술·기능인력양성,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중소기업연수사업), ③ 고용서비스사업(▲청년취업진로지원,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해외취업지원,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 ④ 고용장려금사업(▲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고보),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⑤ 창업지원사업(▲창업사업화지원, ▲창업선도대학, ▲창업인프라지원, ▲창업저변확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등이다.

통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내 놓았다. 이와 별도로 비정규직의 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비정규직사용 부담금제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EITC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더민주가 제출한 비정규직 남용방지 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노동계와 여론의 지지를 받아왔지만 여전히 재계의 반대가 명확하고, 이미 정부와 여당의 과잉입법 의견에 따라 19대 국회 기간 중에 해결되지 않은 과제였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입법전략 없다는 점은 공약을 선언적 수준에 그치도록 하는 효과만 만들었다.

- 한편, 더민주는 공공부문일자리 창출, 공공고용서비스, 모태펀드에 청년계정 설립 등을 공약했다.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율이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낮다는 평가를 반영한 공약으로 보인다.
- 국민의당은 동일업무에 비정규직 교체사용 시 채용금지기간을 두도록 하고, 3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료 기업부담을 공약화 했다. 비정규직 채용금지기간을 두는 것은 과거 17대 당시 노동계의 법개정 요구안으로 제출된 바 있었던 것으로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기업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의 경우 실제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시급하고,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이 자칫 노동자들의 임금동결을 통해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책의 적절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아울러 청년 스타트업 기업의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 정의당은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의무화, 대기업 사내하청 정규직전환, 파견법 단계적 폐지 등의 비정규직 정책을 제출했다. 이러한 공약은 오래된 진보정당의 비정규직 정책이다. 한편 정의당이 제출한 공공기관 인턴제도 폐지는 인턴고용 남용이 가져오는 문제를 공공기관부터 우선해서 해결하자는 취지의 제안으로 제도의 수용성이 높은 공약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 정의당은 협동조합 청년경영자 양성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인재풀 형성과 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 청년일자리 공약은 어디선가 계속 들어본 듯 한 내용들이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격론이 이어졌지만 재계의 반대와 정부의 명시적 반대에 번번히 좌초되어 왔다. 따라서 매우 의미 있는 토론주제이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그리 큰 신선함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 5) 학자금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학자금	-학자금 대출금리 0.2%인하	-저소득층 등록금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 -사립대 전체 대출이자 무이자	-학자금 대출금리 2.7%에서 1.5%로 인하 -대학입학금 폐지 -등록금 심사제도	-국가표준등록금 도입(2014년-350만원)

		전환 -장기적으로 소득연계형 등록금 검토 -국공립대 평균등록금 인하(409만→250만 )	도입 -소득분위산정법의 개선책 강구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	
--	--	--	--	--

- 가계부채문제가 확산되면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청년세대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가장 높게 늘어나고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9.4%p 늘어났다. 한편,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신용유 의자가 2007~2015년 사이 10배가 증가했다는 점도 청년세대에게 학자금이 주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 가늠하게 해 준다. 19대 총선을 전후로 반값등록금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와 대학 자체 노력으로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은 학자금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대 평균 대학등록금은 418만 원, 사립대는 734만 원이며 전체 대학 재학생의 42.7%만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그만큼 젊은 표심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학자금 분야일 것이다.
- 새누리당은 학자금대출금리를 0.2%p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학자금대출금리는 2011년 4.9%, 2012년 3.9%, 2013년 2.9%, 2015년 2학기부터는 2.7%로 꾸준히 하락해 왔다. 금융 시장 전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0.2%p 내려주는 것이 실제 의미 있는 공약인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층 등록금 중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하여 환급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학자금이 부모세대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공략한 공약으로 보인다. 또한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평균등록금을 현재 409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인하하는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정책의 현실성을 고민해야 했겠지만 국공립대에 한정된 정책으로 정책 수혜자가 일부에 제한되면서 사립대 역차별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대목이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학자금대출이자 2.7%를 무이자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 놓았다.
- 국민의당은 학자금 대출이자를 1.5%로 내리고 입학금을 폐지하며 대학에 등록금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공약을 내 놓았다.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동결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기존에 대학측이 징수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입학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특징적이다.
- 정의당은 ‘국가표준등록금’ 을 제안했다. 2014년 기준으로 하면 약 350만 원으로 2015년 사립대 평균등록금인 734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 이처럼 각 정당이 내 놓은 학자금 공약은 정당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면에선 새누리당이 가장 소극적이다. 기존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가 일정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는 듯하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대출이자를 반으로 삭감





하고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실제 매년 지급되는 등록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약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등록금액 자체에 대해 정책적 메시지를 들었다. 온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재원마련대책과 관련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많은 젊은 세대들이 학자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학자금 공약은 젊은 유권자, 특히 재학 중인 20대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끌면서 투표유인으로도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6) 청년주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청년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집 등을 활용한 1~2인 임대주택 제공</li> <li>-젊은 층이 시세 대비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14만호 공급</li> <li>-국공유지 내 연합기숙사 건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임대 재고량을 향후 10년간 13% 수준으로 확대(250만호)</li> <li>-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연금 재원으로 35세 이하 청년에게 청년희망임대주택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최대 2000만원 미만 소액보증금 대출하는 「보증금 안심대출」 제도 신설</li> <li>-1인 가구 중 중위소득 70% 미만인 자에게 연금리 2%, 최장 10년 대출 실시</li> </ul>

- 학자금과 더불어 청년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주거비다. 서울시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서울지역 거주 청년의 10명 중 3명은 주거빈곤 상태에 처해져 있고, 조사대상의 70%가 월소득의 30%이상을 주거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청년들에 대한 주거대책에 대해 각 당도 다양한 정책을 내 놓고 있다.
-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내 놓는 곳은 새누리당이다. 소형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연합기숙사 건립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내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을, 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정의당은 주택보증공사의 소액보증금 보증제도와 1인가구 장기 저리대출을 각각 공약하고 있다.
- 대부분 학업이나 취업을 이유로 가족을 떠나 도시 등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한 주택정책은 실제로 청년유권자와 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에게 밀접한 공약이고, 민감도가 높은 정책들이다. 대부분 정당들이 공급정책 위주의 정책을 제시하는 반면 보증금 중심의 정책을 내 놓고 있는 정의당의 공약이 독특해 보인다. 단, 주택공급 정책의 경우 건설이나 사업시행기간 등의 이유로 현실감 있는 공약이 되기 어렵다는 것은 한계로 보인다.

## 7) 흡수저 등 계층고착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계층고착화	-저소득층 학생 및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국비유학생 선발기회 확대 -취약근로자 훈련지원비 연간 100만원 증액 -취약청년계층 자극증 취득시 응시료 지원	-정원내 기회균형선발 확대 대학에 국가재정지원 확대 -저소득층과 지방고졸생 지방대의대 등 의무할당제 실시 -저소득층과 지방우수인재의 법전원 등 의무할당제 실시 -신입사원 채용시 일정비율 이상 계층할당 선발 -지역인재 균형 선발 의무화	-기회균등선발제 20%수준으로 확대 -입학전형 시 스펙자료제출 금지	-기회균등채용제 도입 -금수저 취업청탁 근절 -친인척 취업특혜 제한 -수저색깔 없는 표준이력서·차별 없는 채용과정 법제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계층 간의 이동이 막힌 현 세태를 빗대어 벌어진 ‘헬조선’, ‘흡수저’ 논란을 의식한 듯, 각 정당이 계층고착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내놓았다. 대부분 입학과 취업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계층 간 차별을 막거나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우대정책들을 내놓았다.
- 새누리당의 경우 해외유학지원 확대와 직업훈련비 증액, 응시료지원 등을 제시해 다른 정당들의 공약과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회균형선발 확대와 취약계층 및 지방 학생의 의대, 의전원, 법전원 등의 입학우대정책, 신입사원의 계층 및 지역 할당 선발 제도 등을 내놓았다. 국민의당도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등을, 정의당도 기회균등채용제와 취업특혜 제한 등을 내놓았다.
- 이 공약들은 최근의 논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의미를 갖지만 제도운영의 현실성에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일진 않아 다분히 선언적 차원의 공약이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 5. 결론

---

- 오늘 주말 개시될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총선거전은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다. 부동산을 포함한 유권자들은 이제 선택의 순간에 도달해 있다. 선거구 획정 지연과 각 정당 내부적으로 발생한 공천 잡음 등으로 이번 4.13 총선은 예년과 달리 공약이나 정책이슈가 갖는 결정력이 반감된 선거라는 평가가 많다.
- 오랜 기간 동안 청년이슈는 중요성을 가졌다. 비록 최근 고령 유권자가 늘어 상대적으로 선거에서 당락결정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정하게 높은 투표참가의향을 내보이면서 지난 총선거 수준의 영향력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은 청년세대의 선택의 갖는 의미를 강화시키고 있다. 투표가 막바지로 다가가면서도 부동산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다. 야권전반의 상황에 반응하면서 최종까지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격전지가 늘어나는 수도권으로 한정해 보면, 타지역보다 많은 인구,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이 지역 2030세대의 투표영향력은 중요성을 갖는다.
- 더미래연구소가 이번 선거기간 중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특징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공약의 보수/중도/진보성의 표면화다. 2012년 19대 총선에 비해보면, 새누리당은 정체성을 뛰어넘는 과감한 공약제출을 시도하지 않았다. 상당부분 지지층의 평가를 의식한 정책구성이라는 특징을 드러냈다. 국민의당은 스스로가 포지셔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간적 위치에서 공약을 구성하고 있다. 구별을 목적으로 ‘중도’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국민의당의 공약이 과연 중도적이었는가 아니면 보수적 정책과 진보적 정책을 고루 섞었는가는 더 섬세한 평가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약은 상당부분에서 유사성이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와 이에 따른 중산층의 몰락이 가져온 현실의 문제에 대응하는, 동일한 전략을 선택한 결과라고 보인다.
- 다른 하나는 이러한 공약들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나 각 정당이 TV토론,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여러 공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잡한 선거정책은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고, 애매하게 표현된 설명만으로는 정당간의 차별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아울러 언론은 유력 정치인들을 따라 갈등적 정치 메시지나 여론조사 결과를 전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결국 정책선거를 위한 환경조성은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인다.
- 청년정책은 청년문제의 급박성을 이해한다면 결코 쉽게 취급할 수 없는 이슈들이다. 이번 선거과정의 특징상 정책이 수면위로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이나 청년기본소득 등의 이슈는 어느 정도 인구에 회자되는 수준에는 달한 것 같다. 그 밖에도 학자금관련 이슈나 청년주거 문제는 학생사회를 중심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진행된 쟁점이기도 하다.

- 복잡한 선거지형 속에서 각 당이 제출한 공약들이 청년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고 투표로 이어질 것인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그런데 만약 전통적으로 낮은 투표참여율을 보였던 청년들이 높은 투표참여를 보인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20대 국회의 과제를 규정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될 것이다. 어느 당이 제1당이 되고, 어느 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오늘날의 청년세대가 적극적 정치참여를 통해 요구하는 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앞으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중요 임무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 2016년 전국 유권자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16.3.30.,

한국갤럽, 갤럽리포트

통계청, 연령별( 시도)추계인구

새누리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정책”(선관위 제출)

새누리당, “일자리 더하기: 공급 중심, 산업 중심, 일자리 매칭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새누리당, “차별과 격차 해소 통한 공정사회 구현”

새누리당,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10대 정책”(선관위 제출)

더불어민주당,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민생복지 공약”

더불어민주당,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국민의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당 10대 정책”(선관위 제출)

국민의당, “일자리와 격차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국민의당, “청년희망프로젝트: 공정한 출발”

정의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10대 정책”(선관위 제출)

정의당, “청춘, 걱정하지 말아요”

---

## 더미래연구소 IF REPORT 2016-03

### 4.13 총선 정당별 주요 공약패키지 분석② 20대 총선 유권자 지형의 특성과 청년공약의 효과

발행일 2016. 04. 08

발행처 (재)더미래연구소(이사장: 최병모)

Copyright ©더미래연구소, 2016 ※본 자료는 더미래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더미래연구소는 대한민국의 '더 좋은 미래' 를 만들어 가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 입니다.  
더미래연구소의 성장은 '후원회원' 의 힘과 꿈으로 가능합니다.

150-8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902호(여의도동, 정원빌딩)

T: 02-785-2030, F: 02-786-2017, E: themirae2030@gmail.com

웹사이트: themirae.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themirae

블로그: blog.daum.net/themirae2030

---